

정부기관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닭·오리도 이제 정부 도축검사 시대 열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그동안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해오던 것을 정부검사관이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포유류(소, 돼지 등)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하였다. 업체소속 책임수의사가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 구인난 등으로 업계의 부담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식육안전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여망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는 모두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계적으로 도축검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공공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닭·오리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가 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정부검사관을 76명(3년간)으로 책정, 연차별로 충원하기로 하고 우선 하루에 10만마리 이

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53개 닭·오리 도축 작업장 중 5개 작업장에 대하여 16명을 충원하여 닭·오리 도축업계의 고용부담과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의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는 닭·오리 도축검사의 전문가임을 고려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검사관 채용 시 우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였으며, 검사원으로 전환, 취업·알선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의 고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의 정부 검사관 제도 도입은 소·돼지처럼 가금류에 대하여도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에 기여하며, FTA 등 개방화 확대 추세에 따른 국내 도축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책임수의사 고용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입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입 전(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또한 수입과정 중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쇠고기 등 육류를 생산하는 해외 작업장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前)에 우리정부의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이미 승인된 해외 작업장은 정기적인 현지점검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3년도에는 질파테를 검출 등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해외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질파테를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는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또한, 국내 수입단계에서는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수입되도록 하고 있다. '13년도 수입 축산식품 정밀검사 계획은 수입 예상 건 대비 육류 6천건(9.8%), 가공품 3,093건(15.2%)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식품이 발생할 경우 정밀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검사결과 부적합 축산식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해당 축산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체, 사유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입 축산식품에 대한 검역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축산식품에 대해 정보수집, 전파를 통하여 정밀검사 강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중단 등 조치로 유해 축산물에 대한 긴급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상담' 귀농귀촌 2년 이내 초보농업인 대상 안정정착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어려움이 많은 귀농귀촌 실천 2년 이내의 초보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지난해 3월, 농림수산물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협력해 문을 열고, 10개월 동안 19,911건의 귀농상담(전화 18,085, 방문 1,093, 인터넷 733)을 했다. 상담 받은 도시민 중 약 11%가 귀농귀촌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0%가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에는 귀농귀촌을 위한 상담 위주의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농촌으로 이주한 초보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현장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영농현장상담은 귀농귀촌 진입 2년 이내의 초보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의 필요성, 문제해결 가능성, 상담성과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월별 우선순위를 정해 연간 100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작목의 기술전문가와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진단 지원해주는 전문가가 조를 이루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상담을 희망하는 초보농업인들은 귀농귀촌종합센터로 전화 또는 서면(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으로 신청하면 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 상담전화 전국 1544-8572, 홈페이지 : www.returnfarm.com FAX 031-299-20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내 위치)

» 정부기관소식

또한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정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전면 개선해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제를 도입해 멘토링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각 시군 지자체별 귀농귀촌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정준용 고객지원센터장은 “올해는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멘토링제도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을 실천한 초보 농업인의 안정 정착에 기여하고, 개편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가진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전국 어디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경남 함양으로 이전 2016년까지 984억 원 투입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구제역과 AI 등 해외 악성 질병으로부터 국가 주요 자산인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현재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경남 함양군 서상면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가축유전자원 국가관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유전자원의 수집·보존·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생축(취소 등 6축종 3,191두), 생식세포(한우 등 9품종 73,822점), DNA(소등 7축종 55품종 25,981점)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주변에는 다수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철쭉제, 눈꽃축제 등 지역축제장과 가까워 가축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높다.

또한 축산과학원 본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 시 가축유전자원시험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중복보존이 어려워져 가축전염병 차단이 용이한 청정지역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1년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계획과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타당성 검토 및 이전적지선정 용역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이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2012년 10월 이전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9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3년에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기초설계 등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장원경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체결이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축유전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국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 해썹(HACCP)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식약청, 해썹 기술지원 및 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순회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3년에도 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

했다.

그동안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해썹 지정을 위해, 총 570개 업소에 57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왔다.

또한 업체 부담을 절감하고 해썹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60일→40일)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 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 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해썹 주요 사업은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다.

〈시설개선 자금 및 기술 지원〉

'14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에서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천만 원 총 1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 의무적용 품목 : 1. 어묵류 2. 냉동수산물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 식품 7. 배추김치(1.~6. : '12.12월부터 의무적용 7. : '14.12.1월부터 소규모업체도 의무적용)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 해썹 지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 지정 업체의 해썹 지정 유지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도 '12년 200개소에 이어 '13년 35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해썹 자율 지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이다.

〈해썹 사후관리 강화〉

모든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하여 해썹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매년 해썹 지정업체 증가에 따라 정기 평가 결과 관리기준이 미흡한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약청은 해썹 적용 준비업체의 경우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13년도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가 오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 전국 7개 권역 : 서울(서울, 경기북부), 부산(부산, 울산, 경남), 인천(인천, 경기남부), 대구(대구, 경북), 광주(광주, 전라, 제주), 대전(대전, 충청), 강릉(강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2년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96.1점(전년 比 0.9점 상승)으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173개 공공기관(공기업 22, 준정부기관 81, 기타 공공기관 70)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81개 준정부기관의 평균점수는 89.4점이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평균보다 6.7점 높은 96.1점으로 준정부기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고객과 함께 축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최고의 품질평가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 중심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고객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과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오픈을 통해 축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노력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 축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HACCP기준원, 평창영월정선축협과 MOU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지난 1월 17일(목) 용평리조트에서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김영교)과 ‘축산물 HACCP Chain 완성거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전(全)단계 HACCP 적용 축산물 공급체계(farm to table HACCP chain system)를 완성, 2018년 동계올림픽에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기준원은 평창영월정선축협 직원 및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HACCP 교육을 개설하고 전담 심사관을 지정·배치하여 HACCP적용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평창영월정선축협에서는 HACCP 관련 현장업무 지원, 교육장 등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全)단계 HACCP적용 축산물 공급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삼아 전 단계를 아우르는 HACCP 전용유통망이 전 국토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첫 발자취를 남기자”고 다짐하였다.

평창영월정선축협 김영교 조합장은 “철저한 사양관리와 계열화 사업 시스템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해온 ‘대관령한우’와 축산물 위생·안전을 선도하

는 기준원간의 MOU 체결은 '대관령한우'가 더욱 우수한 한우브랜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축산물HACCP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전남중기센터, 농수산물 기업 지원 손잡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와 전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농수산물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aT는 지난 1월 22일 오전 중기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T의 농수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지역 식품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기로 했다.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오주승 본부장은 "다른 지역보다 식품 관련 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전남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장현 aT지사장은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송창현 기자 2013.01.22

» 농협중앙회

농협, 희망과 활력 넘치는 농업인 행복시대 만들기에 사활 건다

농축산물 판매 확대와 농업인 및 소외계층 지원에 역점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지난 1월 11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년도에는 농축산물 판매와 소외계층 지원에 조직의 전 역량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는 반세기 만에 경제사업 부문과 신용(금융)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해 경제사업부문은 농산물 유통 구조를 단계적으로 혁신하여 2020년까지 농산물 산지 유통의 62%, 도매유통 39%, 소매유통의 15%를 점유하고, 총 사업량 47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사업부문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총자산 420조원 규모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금년도 농협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제사업 활성화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강화>

■ 농산물 생산 및 판매기반 구축

- 내실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부관계자와 투자심위 위원회 등 심의 강화
- 수도권 등에 물류센터 건립으로 전국에 농축산물 공급망 확충 (금년 6월 안성농식품 물류센터 개장으로 전국단위 농산물 공급 물류 인프라 확대)
-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 정부기관소식

2013년에 2,800여대의 은행사업용 농기계를 추가 공급하여 농작업 면적을 확대

- 무인헬기 공급도 현재 113대에서 130대까지 확대하는 등 방제면적을 넓혀 실질적인 영농지원을 추진
- 인삼 산업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 관리 강화

■ 축산물 판매시설 확충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 주도

- 반드시 도축·가공과정을 거쳐야 하는 축산물의 경우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보다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권역별 도축장과 부분육 가공시설 확충 등 부족한 도축·가공·유통 인프라 확충
- 사료용 원료 공동구매 확대와 수입선을 다변화해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추진
- 축산물 소비지 직거래 판매시설을 확충해 소비자 가격인하에 선도적 대응(안심축산물 전문점, 안심한우마을, 축산물프라자 확충으로 2013년 축산물 유통비 6.4% 절감 효과)
- 경제사업의 신성장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말' 산업 기반 구축 (현 안성팜랜드를 대한민국 호스랜드로 조성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

〈소외계층인 농업인 직접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확대〉

- 농촌 일자리 창출 등으로 농가소득 기여
 - 농촌 취약 계층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 중계센터 시범 운용
 -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2012년 4,863명에서 2013년 6천명으로 확대 계획)
 - 법무부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인력지원도 '13년도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운용
-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대폭 확대

-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를 550개로 확대
- 힘찬병원, 결핵협회 등 농부병 전문치료병원 등과 협약체결로 취약 농업인 의료지원서비스 확대해 연 2만명 혜택 제공
- 농업인 법률이동상담실을 120개로 확대 운영해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강화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차세대 농업·농촌의 후계인력으로 양성

〈지역 농축협 등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

- 지역농축협의 농축산물 생산 판매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4,205억원 증가한 8조4150억원을 지원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지원 내역을 전국 농축협에 공개하고 지역농축협의 사업실적과 연계한 평가체계 구축
- 2017년까지 도시 농축협에서 5천억원 규모의 '도농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촌형 농축협이 농축산물 생산에 사용하도록 지원
- 도농상생기금 조성액 : '12년 530억원, '13년 690억원 목표

〈농업인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로 금융편익 제공〉

- 농업인이 필요한 각종 영농자금은 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농촌의 고금리를 해소하는 한편 각종 영농자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선과 리스크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농축협의 경영관리 능력 제고